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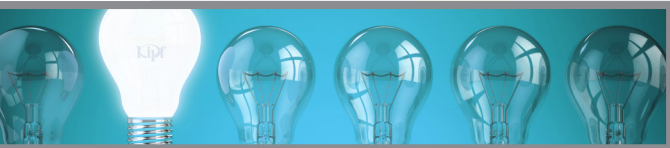
2022년 제 1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panel.kipf.re.kr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2022년 제 1호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재정패널 표본 구성	05
원표본 조사 성공률	07
자료 이용안내	08
상반기 소식	09
13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12
재정패널 활용 연구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정패널 조사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 2022년 현재 15차년도 조사 준비 중

조사 대상

-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14차 통합표본* 9,669 가구

* 14차 통합표본이란 14차년도(2021년)에 실시한 신규 원표본 추가 추출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표본으로 1차 원표본, 2차 대체표본, 분가가구, 14차 신규 원표본을 모두 포함하는 표본

조사 영역

-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조사 특징

- ▶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 ▶ 사회적 이슈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부가조사로 구성하여 조사

관련 문의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 김유현 선임연구원 044-414-2473 오지연 선임연구원 044-414-2225
- ▶ 공식 이메일 panel@kipf.re.kr
-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

재정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이지만 표본 보안을 목적으로 13차년도와 14차년도에 각각 신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음.

신규 표본 추출 목적

- ▶ 표본 마모 및 모집단 대표성 보완
 - 2008년 원표본 추출 이후로 표본의 변동 없이 추적조사를 이어온 만큼 표본마모의 누적으로 모집단의 대표성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신규 원표본을 추출
- ▶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사례수 확보
 - 상대적으로 조사가 어렵고 표본 마모 비율이 높은 집단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유효한 분석 사례수 확보

13차년도 횡단 표본 추출

- ▶ 조사기간 및 신규 추출 가구수
 - 조사기간: 2020년 7월~ 2021년 1월
 - 신규 추출 가구수: 4,030가구
- ▶ 횡단면 분석만 가능한 '13차 횡단표본' 가구로 정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사 기간 연기, 표본 가구의 조사거절 등으로 표본 추출에 편의가 발생하였을 것을 우려하여 13차년도 조사에서 추출한 신규 표본은 횡단면 분석만 가능한 '13차 횡단표본' 가구로 정의하고 추적하여 조사하지 않음.
 - 추적 조사대상이 되는 신규 원표본 가구는 14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출하여 구축한 가구로 정의('14차 신규 원표본')
 - '13차 횡단표본' 가구 구분: h13oldnew 변수값이 '2'이며, hid가 95001~99095번 사이의 값을 갖는 가구

14차 신규 원표본 추출

- ▶ 조사기간 및 신규 추출 가구수
 - 조사기간: 2021년 5월~ 11월
 - 신규 추출 원표본 가구수: 4,035가구
- ▶ 표본 특이사항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8년 이후 건축된 신규 아파트 자료를 추출틀(모집단)로 활용
 - 모집단 분석을 통해 14차 통합표본(기존 표본과 14차 신규 원표본)이 조사시점의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표본 추출
 - 신규 원표본 추출 목적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충분한 사례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조사를 산출하여 각각 300가구씩 추가하여 추출될 수 있도록 설계(과대표집)
 - '14차 신규 원표본' 가구 구분: h14oldnew 변수값이 '2'이며, hid가 85015~89081번 사이의 값을 갖는 가구

최종 14차 통합표본 구성

- ▶ 기존 원표본 가구와 원표본 가구에서 분가한 분가표본 가구, 14차년도 신규 원표본 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14차 통합표본을 구성
 - 14차 통합표본을 기준으로 종단면 가중치가 부여되며, 대상 가구는 총 8,798가구

구분		내용	조사성공 가구수	조사성공률
기존	원표본	1차년도에 추출한 원표본 및 2차 대체 추출 가구	3,948	70.1% (3,948/5,634)
	분가	1차 원표본 및 2차 대체 추출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	783	-
14차 신규 원표본		14차년도에 신규 추출한 가구	4,035	-

14차년도 베타데이터 공개

- ▶ 14차년도 데이터 공식공개는 2022년 12월 말 예정이며,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베타데이터 형태로 2022년 5월 초 공개 예정

원표본 조사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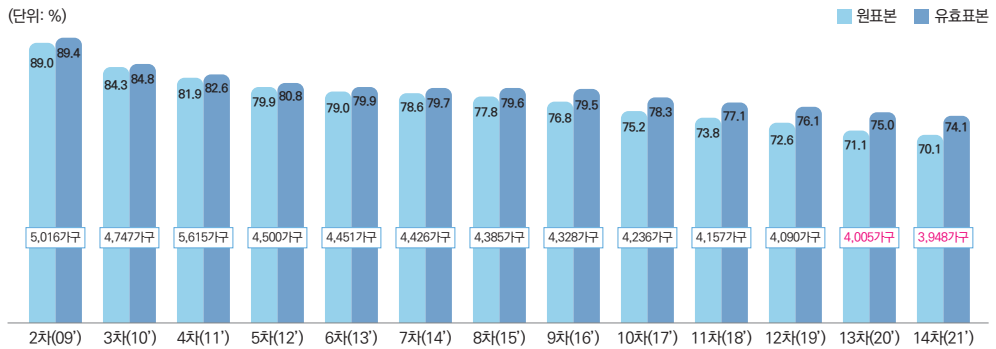
재정패널
소식지

14차년도 기준 원표본 조사 성공률

▶ 원표본(1차 원표본 및 2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70.1%

▶ 유효 원표본* 기준 성공률: 74.1%

* 기존 원표본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사망, 해외이민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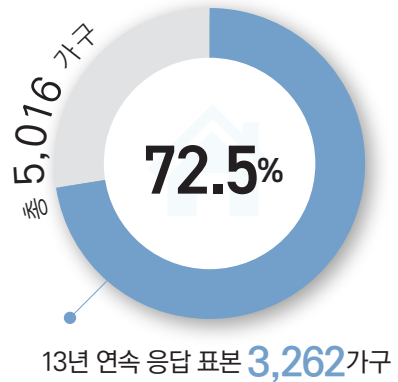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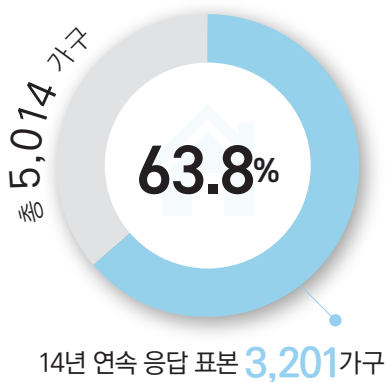


연속 조사 성공률

▶ 14차년도 기준 14년 연속 응답 표본 가구에 종단가중치가 부여 되어 있음(13차년도는 13년 연속 응답 표본 가구)

▶ 1차 원표본 기준 14년 연속 응답 표본: 3,201가구

※ 2차 대체표본까지 포함한 5,016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3년 연속 응답 표본 가구는 총 3,638가구 이나 이들 가구는 종단가중치 부여대상에서는 제외됨



재정패널 공식자료

- ▶ 제공 범위 : 1-13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 제공 방식 :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 2022년 3월 현재, 15차 재정패널 조사 준비 중

자료 다운로드

- ▶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 <https://www.kipf.re.kr/panel/>
-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SMART NaStab

- ▶ 데이터 가공용 STATA 프로그램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함
- ▶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 ▶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SMART NaStab_ver2 (다운로드)
- ▶ 특이사항
 - STATA 13.0버전 이상에서 구동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재정패널 이슈

- ▶ 13차년도 재정패널 공식 자료 공개
 - 2021년 12월, 13차년도 재정패널 자료가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 15차년도 재정패널 현장 조사 실시
 - 2022년 5월부터 15차년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 패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사 소식

- ▶ 2022년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 일시: 2022년 3월 17일 (목) 15:00~16:30
 - 장소: 유튜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채널
 - 발표 자료는 재정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모집

- ▶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원고 모집
 -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할 우수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연구계획서 모집기간: ~ 4월 15일(금)
 - 참가 신청 방법: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술대회에서 연구계획서 제출

일반연구자 학술대회

- ▶ 대상논문: 재정패널 1~14차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 참가자격: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자
 - ※ 일반연구자의 경우 논문 제출 후 발표 시 발표계약을 통해 원고료(100만원) 지급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 ▶ 대상논문: 재정패널 1~14차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 ▶ 상금: 최우수상(○편, 200만원), 우수상(○편, 100만원), 장려상(○편, 70만원)

일정(공통)

- ▶ 데이터 설명회: 2022년 3월 17일(목요일)
- ▶ 연구계획서 제출마감: 2022년 4월 15일(금요일)
- ▶ 자료 사용 적격자 발표: 2022년 5월 초 예정
- ▶ 최종논문 제출마감: 2022년 8월 15일(월요일)
- ▶ 학술대회 개최: 2022년 9월 30일(금요일)

참가방법(공통)

- ▶ 재정패널 홈페이지(www.kipf.re.kr/panel/)를 통해 연구계획서 제출
- ▶ 자료 사용 적격자에게 1~14차 자료 제공(14차 자료는 베타버전)
- ▶ 원고마감일까지 최종 원고 제출(마감일 엄수 요망)
- ▶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발표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논문 공모

재정패널 논문 공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2021년 조사한 14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분석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또한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발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논문 공모 일정



-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 2022년 4월 15일 (금)
- 자료 사용 적격자 발표 | 2022년 5월 초 예정
- 최종 논문 제출 마감 | 2022년 8월 15일 (월)
- 재정패널 학술대회 | 2022년 9월 30일 (금)

참가자격 및 상금



일반연구자

- 참가자격 |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자
- 원 고 료 | 100만원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휴학 및 졸업예정자 포함)
- 상 금 |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70만원

참가 방법(공통)



- 1 | 재정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계획서 제출
- 2 | 자료 사용 적격자에게 1~14차 베타자료 제공
- 3 | 원고마감일까지 최종 원고 제출
- 4 |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발표

온라인 데이터 설명회



- 일 시 |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예정)
- 신 청 | 3월 15일까지 재정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 송부
- 내 용 | 재정패널 자료 사용방법 안내 및 샘플 데이터 제공
- 비 고 | 참가비용 없음(학술대회 비참여자도 신청 가능)

재정패널 학술대회



- 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 328호
-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개최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연락처



- 유선전화 | 044-414-2473/2225
- 이 메 일 | panel@kipf.re.kr
-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

13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13차년도 표본가구 구성

13차년도 조사 자료에 포함되는 표본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1차 원표본 및 2차 대체표본 가구 4,005가구, 원표본 가구의 가구원 분가로 인해 발생한 분가 757가구, 13차 횡단표본 4,03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3차년도 조사시점인 2020년 추가 추출한 4,030가구는 횡단표본 가구로 정의하여 14차년도 이후 추적 조사가 되지 않는 가구이며, 13차년도 횡단면 분석에서만 활용 가능한 가구이다.

(단위: 가구)

구분	원표본가구	분가가구	13차 횡단표본 가구	총합계
가구수	4,005	757	4,030	8,792

표본가구 인구학적 특징

■ 가구원 수

1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단위: %)

진행차수(조사시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2차 (2019년)	26.7	28.4	23.6	16.5	4.8
13차 (2020년)	27.9	29.8	21.6	16.1	4.5

■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1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성별은 12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연령대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늘어난 수준이었다.

(단위: %)

진행차수(조사시점)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2차 (2019년)	47.0	53.0	20.7	10.8	14.0	18.0	12.6
13차 (2020년)	46.6	53.4	20.7	11.6	14.4	16.6	15.0

■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와 60대 가구원의 비중이 높았다.

(단위: %)

진행차수(조사시점)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2차 (2019년)	46.8	53.2	21.0	10.1	13.9	18.2	12.8	24.1
13차 (2020년)	46.3	56.7	19.8	11.0	13.8	17.1	14.7	23.6

■ 가구 조사표 결과 요약

■ 가구 평균 연소득

재정패널 표본가구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을 구하기 위해 가구원 조사표에서 조사된 연간 소득의 총금액을 총 유효표본 가구 수(8,792가구)로 나누어 보았다. 이때 소득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무응답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재정패널 조사 전체 표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9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소득이 평균 3,226만원이었으며, 사업소득이 1,104.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은 사회보험 급여소득 179.5만원이었다.

(단위: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근로소득	70.1	4,607.5	3,226.0	
사업소득	29.2	3,789.9	1,104.7	
이자 및 배당소득	2.9	318.7	9.1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4	3,623.3	13.6
	주택	4.8	1,405.6	67.8
	상가 및 사무실	1.6	1,970.4	32.0
	기타	0.1	851.2	0.6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14.4	531.4	76.3
	노인요양특별급여	0.0	0.0	0.0
	그 외 기타소득	3.5	1,060.7	37.5

13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양도소득 / 손실	양도소득	0.4	522.2	2.1
	양도손실	0.1	956.2	0.6
보험급여	사회보험 급여	19.9	902.0	179.5
	민간보험 급여	9.2	534.0	50.6
정부지원	정부지원 현금소득	21.4	415.5	87.3
퇴직관련급여	특수직 퇴직연금	1.8	2,982.4	54.6
	특수직 퇴직일시금	0.1	4,272.3	2.7
	개인형 퇴직연금	0.1	1,034.4	0.6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0.9	2,472.5	22.2
연간 총소득				4,965.2

■ 가구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 '금융기관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85.2%로 나타났으며, 해당 가구의 평균 '예·적금' 금액은 3,639.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표본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4,077.7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85.2	3,639.8	3,098.2
펀드 가입 금액	3.0	4,480.2	133.0
채권 보유 금액	0.2	10,161.1	21.8
주식 보유 금액	7.0	4,585.5	320.6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8.8	2,580.0	226.1
연금저축	7.5	2,647.3	196.0
빌려준 돈	1.0	2,897.6	28.7
기타 금융자산	0.7	8,710.7	59.3
금융자산 총액			4,077.7

■ 가구 부동산자산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 현재 거주 중인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52.0%였으며, 해당 가구의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평균 금액은 약 3억 2,984.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표본 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1억 912.2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거주 자가주택의 시가총액	52.0	32,984.6	69,006.6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10.1	39,281.5	3,976.5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8.9	22,286.9	1,972.4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2.1	54,327.5	1,154.1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39.8	11,289.0	4,495.5
부동산자산 총액			10,912.2

■ 가구 부채

가구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5.4%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응답 가구의 부채 평균 금액은 1억 1,817.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부채 유형은 금융기관 대출로 전체 가구의 9.8%를 차지하였으며, 해당 가구의 부채 평균 금액은 7,461만원 가량이었다. 금액상으로 보면 전세금 및 보증금 환급 예정액이 1억 4,458.7만원으로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 금액은 3,936.6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3.0	8,919.7	273.0
학자금 대출	0.7	1,751.6	11.7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15.4	11,817.7	1,819.2
금융기관 대출	9.8	7,461.0	731.4
신용카드 대출	1.5	1,969.2	30.5
전세금/보증금	9.7	14,458.7	1,032.3
기타	0.9	4,825.7	38.5
부채 총액			3,936.6

가구원 조사표 결과 요약

■ 소득활동 현황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비율은 81.2%로 나타났고, 이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0%,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정부지원금 등이 있으면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는 18.8%이며, 이 중 14.1%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위: %)

소득 활동함		소득활동 하지 않음	
81.2		18.8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직	비구직
70.0	30.0	14.1	85.9

■ 경제활동 상태

현재 소득 활동 중인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 형태는 응답자 대부분이 '전일제'(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구분	세부항목	분포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자	52.6
	임시직 근로자	11.1
	일용직 근로자	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3
	고용원을 둔 사업주	4.7
	무급 가족 종사자	3.6
근무시간 형태 (임금근로자)	전일제	87.0
	시간제	13.0

■ 가구원 연간 소득

가구원 개인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61.8%)과 사업소득(20.5%)이 높았으며, '정부지원 현금소득'(17.8%) 수급자의 비율도 높았다. 소득가구원의 근로소득 평균 금액은 3,354.5만원, 사업소득(순)소득 평균 금액은 3,461만원이며, 조사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은 3,226.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만원)

항목	소득 가구원		조사 가구원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근로소득	61.8	3,354.5	2,071.3	
사업소득	20.5	3,461.0	708.8	
이자 및 배당소득	1.9	309.6	5.8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3	3,528.0	8.8
	주택	3.3	1,340.9	43.5
	상가 및 사무실	1.1	1,920.6	20.5
	기타	0.0	851.2	0.4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9.7	503.5	48.9
	노인요양특별급여	0.0		0.0
	그 외 기타소득	2.3	1,051.4	24.1
양도소득 /손실	양도소득	0.3	490.8	1.4
	양도손실	0.0	956.2	0.4
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		0.7	2,483.6	15.0
보험급여 /정부지원 /퇴직급여	사회보험 급여	12.8	612.8	78.4
	민간보험 급여	6.1	295.8	17.8
	정부지원 현금소득	17.8	318.2	56.1
	특수직 퇴직연금	1.2	2,896.1	35.0
	특수직 퇴직일시금	0.0	4,272.3	1.8
	개인형 퇴직연금	0.0	1,034.4	0.4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0.6	2,454.8	14.2
연간 총소득			3,226.6	

13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가구원 소득 공제 현황

가구원 조사대상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9%이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1%이었다. 또 0.5%의 가구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응답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 응답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동시 신고	해당 없음
42.9	13.1	0.5	43.5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 중 공제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세액이 0원인 사례까지 포함하여 공제현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금액이 158.1만원,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액이 155.8만원, 보험료 공제액이 15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자들의 결정세액 평균은 149만원이었다.

(단위: %, 만원)

항목	공제 가구원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90.1	173.0	155.8
	보험료	88.8	169.2	150.0
	보장성 보험료	75.9	11.4	8.3
의료비	의료비	26	46.7	10.5
교육비	교육비	19.4	46.1	7.6
주택자금	주택자금	10.3	283	29.0
	주택마련저축	6.9	57	3.9
	월세	2.2	29.2	0.7
기부금	기부금 소득공제	0.3	142.9	0.4
	기부금 세액공제	20.4	21.6	4.3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0.6	52.4	0.3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0.0	28	0.0
	퇴직연금	4.5	37.1	1.7
	연금저축	0.1	30.4	2.4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조합출자 등	0.1	174	0.1

항목		공제 가구원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66.3	248.1	158.1
우리사주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출자	0.2	387.6	0.9
기타	기타 소득공제	0.7	111	0.8
	기타 세액공제	0.8	78.4	0.5
결정세액		100	149.3	149.0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가구원 중 56.1%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았으며 공제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184.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공제를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69.9%였고, 공제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7.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만원)

구분	세부항목	공제 가구원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56.1	184.7	103.5
기부금	기부금 소득공제	0.1	40.1	0.0
	기부금 세액공제	3.6	38.3	1.3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0.2	44.1	0.1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0.0	-	0.0
	퇴직연금	0.1	31.3	0.2
	연금저축	2.9	28.7	0.7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조합출자 등	0.1	1,500.0	1.1
표준공제	표준공제	69.9	7.1	5.0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0.1	272.1	0.2
기타	기타 소득공제	4.8	261.4	12.5
	기타 세액공제	8.2	58.7	4.8
성실사업자대상 공제 항목	의료비	0.2	48.3	0.1
	교육비	0.5	71.6	0.4
결정세액	결정세액	100	291.7	142.0

가구원 의식조사 결과요약

■ 조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본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 나왔으며, 세금 대비 정부의 혜택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조사되었다. 정부의 혜택이 낮은 수준(약간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40.5%로 그 뒤를 이어 높게 조사되었다.

(단위: %)

구분	항목	분포
본인 경제적 능력 대비 세부담 평가	매우 많이 납부한다	6.2
	약간 많이 납부한다	35.8
	적절하게 납부한다	52.5
	약간 적게 납부한다	4.3
	매우 적게 납부한다	1.1
본인 납부 세금 대비 정부 혜택 평가	매우 높은 수준	0.6
	약간 높은 수준	12.1
	적당한 수준	46.8
	약간 낮은 수준	32.4
	매우 낮은 수준	8.2
소득 유사 그룹 대비 본인 세부담 평가	매우 높은 수준	5.9
	약간 높은 수준	35.3
	적당한 수준	55.6
	약간 낮은 수준	2.6
	매우 낮은 수준	0.6

■ 소득격차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 84.4%(매우 크다+약간 크다)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7.4%로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정부 정책이 대체로 중요)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구분	항목	분포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크다	30.8	
	약간 크다	53.6	
	보통이다	14.8	
	별로 크지 않다	0.7	
	전혀 크지 않다	0.0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커질 것이다	38.8	
	약간 커질 것이다	48.6	
	보통이다	11.7	
	약간 작아질 것이다	0.8	
	매우 작아질 것이다	0.0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정부 정책 ↑↓ 개인 노력	①	24.0
		②	45.0
		③	24.6
		④	5.5
		⑤	0.8

■ 세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세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은 중부담-중복지라고 평가하는 가구의 비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중부담-중복지'라고 응답(41.2%)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부담-고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단위: %)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	바람직한 수준
저부담 - 고복지	3.8	8.3
중부담 - 고복지	10.5	26.6
고부담 - 고복지	2.9	5.5
저부담 - 중복지	10.9	11.9
중부담 - 중복지	41.2	41.2
고부담 - 중복지	8.1	2.0
저부담 - 저복지	5.8	2.4
중부담 - 저복지	13.4	1.8
고부담 - 저복지	3.4	0.4

■ 납세 관련 태도

■ 위험회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묻는 질문에서 1억원을 모두 예금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5천만원씩 예금상품과 펀드상품에 나눠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4.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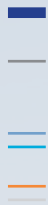
(단위: %)

A. 예금상품	B. 펀드상품	비율
0원	1억원	3.3
1천만원	9천만원	2.5
2천만원	8천만원	4.2

A. 예금상품	B. 펀드상품	비율
3천만원	7천만원	6.2
4천만원	6천만원	6.8
5천만원	5천만원	14.2
6천만원	4천만원	6.7
7천만원	3천만원	8.8
8천만원	2천만원	7.8
9천만원	1천만원	4.5
1억원	0원	34.9

- 재정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이 동일한 패널조사로, 현 연도와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정패널 홈페이지(www.kipf.re.kr/panel/)에 게시되어 있는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panel.kipf.re.kr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활용 연구

지난 소식지 수록 이후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초록입니다. <편집자 주>

Effect of Real Estate Holding Type on Household Debt

김선주

산경연구논집, 12(2), 41-52.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y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and household deb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al estate ownership type was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4 models: model 1(1 household 1 house and self-resident), model 2(1 household multiple real estate ownership and self-resident), model 3(1 household 1 house and rent residence), model 4(1 household holds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and rent residence). The analysis method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household total debt. As independent variables, household debt, annual gross household income, financial assets, real estate net assets, annual repayment, demographic & residential characteristics were used. **Results:** 1) Model 4 has the highest household debt and the highest gross income, Model 2 has the most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al estate net asset, and Model 1 has the highest real estate mortgage payments. 2) The positive factor of common household debt determinants is real estate net assets, and the negative factor is financial assets. 3) It was th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at acted as a positive factor in common for the four models. In other words, the more financial assets, the less household debt.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e more household debt. The annual repayment of financial liabilities had no influence on household debt, while the

annual repayment of loan liabilities and household deb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enefits and systems that can increa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Specific alternatives include tax benefits and reduced fees for financial asset investment. 2) In the case where a homeless person prepare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The specific alternative is to give additional points for pre-sale or apply an interest rate cut incentive for mortgage loans.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저소득층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

김영민, 정원석

보험금융연구, 32(2), 109-130.

본 논문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저소득층)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서민형 ISA가 해당계층의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민형 ISA는 저소득층이 금융투자에 참여할 확률을 약 37.9%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서민형 ISA가 저소득층의 금융투자액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ISA가 저소득층을 금융투자에 진입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금융투자자로 이끌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금융투자를 통한 서민 재산형성'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 수명, 은퇴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 개인연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

손지훈, 윤상용, 김선애
리스크 관리연구, 32(1), 33-58.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NaStab)의 9차~11차의 3개년도(2016~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수명, 은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개인연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으로 건강상태, 은퇴 시점, 기대수명, 노후 생활비 등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주관적 요인이 인구·사회적, 경제적 변수 등 객관적 요인과 결합하였을 때의 상호작용이 개인연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수록, 예상 은퇴 시점이 빠를수록, 그리고 노후 적정 생활비를 높게 예상할수록 개인연금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교호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주관적 기대수명과 예상 은퇴 시점이 개인연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였는데, 주관적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퇴직 예상 시점이 빨라질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간 총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대수명이 길고 예상 은퇴 시점이 빠르며 이는 개인연금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미래 불확실성 요인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인연금 가입을 위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개인의 장수위험과 은퇴로 인한 소득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개인연금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강민조, 허광복

유라시아연구, 18(3), 97-114.

조세시스템의 특성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상당 수준의 관심과 지식이 요구된다.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신념을 조사하는 경우 직면하게 되는 의문점은 설문 응답자들이 과연 현행 조세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세 및 재정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부이다. 조세제도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의 차이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념 및 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조세지식의 대용변수로서 대부분 납세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조세 이해력 수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접근법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이해수준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조세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지식 수준의 현황 및 조세이해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납세자 교육 및 홍보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인 10차 재정패널데이터에 신설된 조세 및 세정에 관한 납세자들의 인식 항목 중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직접 측정하는 항목인 정답 및 모름 응답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행동에 관한 주요 경제·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조세이해력에 미치는 체계적인 영향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 중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 항목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의 경제적·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조세이해력의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최종학력 수준, 총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대상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경제·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 대한 무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식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활용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학술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이순국, 전용일

여성경제연구, 18(2), 49-71.

본 연구는 가계 의료비 부담이 가구주 성별 특성별로 어떤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6개년 자료(2014년~2019년)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성별 특성별로 가구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결정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대비,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감소한다. 또한, 취업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의료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부담은 증가한다. 한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일수록 소득대비,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나, 여성가구주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하며, 비정규직일수록 부담은 더 크다. 또한, 저축과 부채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부담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음(-)의 효과를 보여 자산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성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과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재정운명을 위해서 가구주, 가구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1인 가구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심종섭, 홍은표

인문사회 21, 12(1), 3,147-3,158.

연구목적은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내용은 '2018년 전국재정패널조사'에서 추출한 711개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찰하고, 1인 가구 특성과 1인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자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특성변수로 총 13개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동산자산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1인 가구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청·중년층은 보증금 있는 월세, 그리고 노년층은 자가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 가구 중 연령이 어리고, 소비지출이나 금융자산비중이 많을수록, 주거 및 주택유형이 불안정할수록, 부동산자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소득과 주거비는 많을수록 부동산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거안정의 대리변수로 부동산자산 수준을 활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최소 5가지의 1인가구 특성(연령, 소득, 소비지출액, 거주비, 금융자산비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동차세 가격요소 도입방안*

김필현, 안지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4)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행 배기량 중심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최근 들어 배출가스 규제, 원유가격 불안정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점차 낮은 배기량으로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세의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형평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격기준 과세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가격요소의 과세표준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단계별로 여러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 취득단계에서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비례세율 구조인 개별소비세와 달리 취득세는 배기량이나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됨.
- 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로서 소유분 자동차세가 부과됨.
- 운행단계에서는 운행 중 소비하는 연료 소비에 대하여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 연구보고서 수록 자료로 초록대신 요약이 삽입되어 있음.

부과하며, 지방세로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26%로 부과됨.

- 제세부담금 중 본 연구의 초점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구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장기적 세수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취득세와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의 세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세 소유분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4.4조 원 가량의 규모로 성장함.
 - 자동차세 주행분은 2010년 이전에는 세수 증감률이 컸지만, 2010년 이후에는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취득세는 2018년 기준 약 4.4조 원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 자동차세와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자동차 시장 동향

-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2천만 대를 넘어서고 있음.
 - 승용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6.7%에서 2019년 81%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승용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11년 96.2%에서 2019년 94.2%로 4%p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차량의 약 40%가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음(2019년 기준).
- 국내 자동차시장에서의 동향은 크게 다운사이징, 친환경자동차 및 수입자동차의 비중 확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먼저 배출가스 규제, 원유가격 불안정 등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진행 중임.
 - 국내 자동차시장은 배기량 2,000cc급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산은 소형에서 중형으로 외산은 대형에서 중형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같이 내연기관을 탑재하지 않은 자동차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수는 2012년 1천 대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이르러서는 2만 대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
-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개방과 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 등으로 외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 국내 수입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6%에 이르고 있음.

□ 가격요소 도입의 필요성

- 자동차세 관련 이론적 논의의 흐름
 -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세제의 환경과세적 성격 강화 주장이 득세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루어졌음.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세의 환경과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게 됨.
 - 또한 현행 자동차세에 재산과세가 지녀야 할 특성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함.
- 재산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한 시각
 - 자동차세의 성격을 환경과세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의 근거에는 자동차가 필수소비재화 되고 있어 재산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존재함.
 - 자동차를 필수소비재로 보는 실증적 논거는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소유의 보편화를 재산과세 탈피 논거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낮음.
 -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소비실태나 자동차를 바라보는 타 제도 등을 고루 감안할 때 자동차세의 재산과세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형평성 악화
 - 배기량과 가격 간 관계의 괴리 심화가 초래하는 소유분 자동차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여러 관련 연구들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김필헌, 2016; 박상수·허등용, 2018).

- 제조연도 2019년 차량을 기준으로, 외산차량의 가격은 국산차량에 비해 1.82배 높으나, 배기량은 1.06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사례

• 일본

- 일본은 2019년 기존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성능할로 대체하였음.
 - 환경성능할은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기존 취득세와 동일한 성격이지만, 구입하는 자동차의 환경성능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유사하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도도부현세인 자동차세 종별할(割)을 과세함.
- 자동차세 종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2019년부터 환경영향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기 시작함.

• 미국

- 미국은 각 주마다 자동차에 과세하는 세목과 기준이 다양함.
- 가격기준을 등록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들의 사례는 아래와 같음.
 - California 주는 \$46에 추가적으로 차량의 가치(Vehicle Value)에 따라 \$25 ~ \$175로 차등하여 과세하며, 2020년부터는 California 주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음.
 - Iowa 주는 차량금액의 0.5~1% 비율(차령에 따라 차등)로 과세하고 있으며, 추가로 100lbs 당 \$0.4를 부과하고 있음.
 - Michigan 주는 제조업체 권장소매가격(Manufacture's suggested retail price)에 기초하여 과세하고 있음.
 - Minnesota 주는 기본금액 \$10에 차량 기준가격(the base value of the vehicle)의 1.25%를 추가로 과세하며, 차량 기본가격은 등록연도에는 100%이고 등록연도 이후에는 매년 10%씩 감소하지만, 11년 이후에는 총액이 \$25로 고정되어 과세함.
 - Louisiana 주는 차량 가격의 0.1% 비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의 최소금액을

재정패널 활용 연구

\$10,000으로 설정해 두고 있음.

- 가격기준을 면허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Arizona 주, California 주, Colorado 주의 사례는 아래와 같음.
 - Arizona 주는 제조업 기준 소매가격의 60%를 과세의 가치금액으로 산정함.
 - California 주는 차량의 가치(Vehicle Value)의 0.65%를 과세함.
 - Colorado 주는 과세가치(Taxable Value)에 따라 0.45~2.1% 세율을 차등 과세함.

□ 가격요소 도입방안 분석

- 분석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음.
 - 세율은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함.
 - 해당 세율을 전체 차량에 적용할 경우와 신규 차량에만 적용할 경우를 고려함.
 -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를 활용함.
- 시나리오별 결과
 - 비례세율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했을 때, 조세부담 변화가 가장 높은 구간은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격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임.
 -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면서 차량가격은 2,000~4,000만원 사이에 있는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데, 이 구간에서의 세액은 2,27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감소함.
 - 비례세율 적용 시 구간별 자동차 1대당 평균세액의 변화를 보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주로 가격이 높은 차량에서의 세액 변화가 상대적으로 큼.
 - 초과누진세율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초과누진세율을 전체 차량에 적용할 때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가격 2,000~4,000만원 구간에서의 총 세액변화는 5,430억원인 것으로 분석되며, 신규 차량에만 적용할 경우에는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가격 6천만원 초과구간에서의 세액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167.0%),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가격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의 세액 변화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58.2%).

- 자동차 1대당 평균세액으로 보면,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배기량 1,600cc 이하 구간에서는 차량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조세부담이 감소하나, 그 외 구간에서는 모두 현행 대비 2.9~8.2배 가량 늘어나게 됨.
- 초과누진세율을 신규차량에만 적용할 경우 조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구간은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고 가격도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함.

• 소득대비 조세부담 변화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대비 조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였음.
- 먼저 소득구간별로 세액 부담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조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배기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초과누진세율을 가격기준으로 적용 시 최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조세부담은 증가함.
-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불형평성과 누진도가 확대됨.

• 가격기준 전환 시 세수 감소 가능성

- 일정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세수 전망은 어려우므로, 증감 여부는 가격기준으로 전환 시 세수와 배기량 기준 유지 시와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격기준으로 전환시 자원조달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앞서 본 차량 잔존율 급감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임.
- 전체 세수의 변화는 새로 과세표준이 되는 신차로부터의 세수 증가분과 기존 차량의 노후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가격 기준으로 전환 시 세수의 증감 여부는 차령 3년 이하 차량의 비중과 그 외 차량의 비중 간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받을 것임.
- 최근 5년 간 차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차량가격은 전체적으로 상향 추세임.
- 종합해 보면 현행 차령별 비중과 차량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고 할 때 가격기준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현행 배기량 기준의 세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가격기준 전환은 세수 증가가 전망될 것이므로 세수 확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정책제언

-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차량부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형평성 수준은 세율구조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향후 세수확보 가능성과 납세자의 조세부담 변화 양상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임.
 - 그렇다면, 조세부담액 변화가 가장 작은 경우인 신규차량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봄.
- 가격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신규차량과 중고차량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함.
 - 신규차량의 경우 출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중고차량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삼을 가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자동차세 과세를 위해 시가표준액 제도를 준용하려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봄.
 -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좋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징수행정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연비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 가격기준 전환 시 일부 차량에 대한 조세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그 밖에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 급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제 적용이나 가격기준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택 보유와 정치적 성향 간 관계 연구

김대환, 김보경
부동산연구, 31(3), 29-44.

정치적 성향의 결정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자산과 정치적 성향 간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두 변수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과 연계한 정치적 성향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2016~2019)를 활용해 주택 보유 여부, 보유한 주택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주택자에 비해 유주택자의 정치적 성향이 1.15배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 주택의 수와 가격이 증가할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자가보유율과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의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택과 정치적 성향 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부동산에 기반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면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

김병남, 송헌재

재정학연구, 14(3), 93-119.

본 연구는 재정패널 5~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추가 세 부담 의향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인식할 경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직접 기부를 선호하고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인식할 경우 종교기관을 통한 간접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관찰된 반면 조세제도에 관심이 없는 경우 기부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세 부담 의향에 있어서는 추가 세 부담 의향이 없는 경우 기부금 지출을 줄이는 반면 추가 세 부담 의향이 있는 경우 기부금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와는 달리 정부지출과 민간기부의 관계에서 구축효과와 구인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라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기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정책설계와 세제혜택 운용 등을 통해 민간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계의 부동산 분배 상태와 보유세 개편의 계층별 세부담 효과

박종선, 정세은

경제발전연구 제27권 2호, 127-160.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과열이 진정되었으나 2014년 부양정책으로 다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부 이후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약한 부동산 세제, 저금리 하에서의 투기수요 확대가 그 원인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핀셋 규제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근에서야 취득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전면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이 가계의 부동산 실효세율과 담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추정하였다. 재정패널 제12차 자료로 추산한 결과 현행 제도 하에서 보유세 대상 가구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액은 0.09%이며 담세율은 2.21%이다. 모의 실험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화와 세율인상 정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90%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에 대해 실효세율과 담세율 수준을 모두 현재보다 약 1.8배 증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의 2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공시가격이 90% 현실화 한다고 해도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만 저소득-고자산 고령계층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들에 대해 과세이연제나 주택연금 활용도 제고 등의 대응책은 필요하다.

교정적 기능 관점에서 차량별 외부성 차이를 고려한 적정 유류세 연구

이동규, 김빛마로

예산정책연구, 10(2), 71-106.

경유세를 중심으로 유류세의 교정적 기능을 위한 세율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학계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다. 교정세는 소비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소비를 조정함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현행 수송용 유류세는 동일한 연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 제도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정적 기능 관점에서 이러한 과세방식은 동일한 연료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외부 비용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때 적용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동일한 연료라도 이를 사용하는 개체별로 외부비용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의도했던 교정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별 외부비용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유류세 세율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는 Diamond(1973)의 모형에서 도출된 최적세율을 검토하였고, 실증적으로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경유 자가 차량을 연식에 따라 유형을 나눌 때 집단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 측면의 외부비용이 큰 노후 경유차 소유 가구들이 신형 경유차 소유 가구들보다 경유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유류 소비에만 과세할 경우 외부비용의 단순평균보다 더 높은 세율로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중손실을 줄이는 데에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대상인 화물차까지 유류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반대로 외부비용의 단순평균보다 더 낮은 세율로 유류세율을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남성 흡연자의 궤련형 전자담배 선택요인 분석

설귀환, 정지운, 임병인
한국경제연구, 39권(2), 31-50.

본 연구는 10차(2017년)와 12차(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흡연자 중 누가 궤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이하 HTP)를 선택하는지를 실증하였다. HTP의 기능적 특성으로부터 추론되는 HTP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자 측면의 변수를 설정한 뒤, 해당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본인 소득, 위험회피 성향, 직종(실내 근무 여부), 과거 담배소비량, 흡연 가구원 수, 연령,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TP 선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흡연자와 신규 흡연자로 구분한 부분표본에 대한 추정결과는 기존 흡연자가 HTP로 소비를 대체하는 결정과 신규 흡연자가 HTP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흡연자들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담배 흡연자와 이질적인 HTP 흡연자의 특성은 정부의 HTP 세율 조정 방안 수립 및 HTP를 포함한 금연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보유가 가구 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송호신, 유정민

사회과학연구논총, 37(1), 103-141.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데이터(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를 이용하여 주택 보유가 가구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주택 보유가 가구 소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소득 탄력성 및 순자산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또한, 순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그리고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해당 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추정한다. 항목별 소비에 대한 분석과 연도별 분석도 수행된다. 다양한 모형의 분석 결과, 주택 보유는 소비수준을 낮추는 효과와 소비의 순자산 탄력성, 자산 탄력성 그리고 비금융자산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하여 유사한 인구·경제·사회적 조건을 가진 주택 보유 집단과 비보유 집단을 구성하고 두 집단의 평균 소비의 차이를 추정한다. 매칭을 이용한 분석 결과, 주택 보유 자체는 평균적으로 가구 소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평균 소비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특징이 매우 유사한 경우의 주택 보유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유형태별 주거비용 차이 분석: 금리 및 보유세 변화를 중심으로

윤성진

LHI Journal, 12(1), 69-86.

본 연구는 점유형태별 주거비용 추이를 살펴보고, 금리 및 정책적 변화가 주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계산하였으며,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헤도닉 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자가, 전세, 월세에 대한 주거비용을 추정하였다. 주거비용은 각각 가계가 실제로 지출하는 명시적 주거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잠재적 비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금리 기조는 이자 비용과 기회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을 일으킨 가구의 명시적·잠재적 주거비용 하락 및 대출이 없는 가구의 상대적 주거비용 증가를 유발하였다. 이는 대출금이나 투입 금액이 높은 전세나 자가 가구의 주거비용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가구의 상대적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자가의 주거비용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한편, 공시가격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는 자가 가구에게 부담으로 작동하지만 금리 및 가격 상승 기대 변화에 비교했을 때 미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의 급격한 매매수요 증가현상을 설명하고, 상대적 주거비용 증가를 경험한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한다. 동시에 금리가 회복될 경우 과도한 차입에 기초한 매매가구의 명시적 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신영호

조세연구, 21(1), pp59-8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별로 공제제도 활용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공제 제도를 통한 조세절감과 납세의식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납세자별 특성, 고소득자 여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자 등 소득 종류별 적용되는 공제제도가 다르므로 세액절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며, 납세의식 관계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공제금액과 공제비율은 세액절감(비율)과 각각 음(-)과 양(+)
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 공제금액의 크기보다는 본인 소득금액 대비 공제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세액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자에 비해 세액절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별 소득공제 활용에 차이가
나며, 종합소득신고자는 자진 신고·납부하므로 공제나 기타 조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된다. 납세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소득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조세공평성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조세공평성이나 정부혜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추가 세부담 의향의 경우 현재 본인 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이 적은 납세자일수록 추가 세금 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고소득자 여부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차이, 소득공제 비율이 실제 세액절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세액절감 정도나 고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 등 납세자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여성배우자 전업주부 여부와 종사상 지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김현동

사회과학연구, 28(1), pp48-74.

본 연구는 여성배우자의 경제적 역할이 자녀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파악 하고자 한다. 여성배우자의 전업주부 여부와 종사상 지위(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분석 자료는 가구 수준으로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재정패널조사는 출산에 대하여 6차 2012년부터 시작해서 11차 2017년 6년 동안 조사 하였으며 출산과 더불어 가구와 가구구성원에 대한 직업과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되었다. 출산은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기혼여성근로자의 첫째 자녀 출산은 전업주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기혼 여성근로자의 후속 자녀 출산은 전업주부보다 낮지만 자영업 기혼여성 근로자의 후속출산은 전업주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효용론과 성역할인식이 병행되어야 여성배우자의 출산을 설명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경제적 측면으로 출산행위를 설명해보면 여성배우자는 출산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출산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추산된 경제적 효용으로 출산을 선택하므로 기혼 여성근로자는 후속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성배우자는 경제적 효용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전통적인 성역할인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자 첫째 자녀 출산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듯 여성배우자가 출산을 선택하는 과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혼여성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전업주부 즉,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혼여성근로자에게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업주부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2019년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현황 및 추이

강수현, 정원정,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31(1), 140-144.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refers to measure the level of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due to medical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etween 2006 and 2019 using available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Korea Health Panel (KHP), and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Trend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The households experienced a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2.44% in 2019 using the NaSTaB data. Trend analysis was significant with the decreasing trend(annual percentage change [APC], -4.49; $p < 0.0001$) in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lso, the results of the 2017 KHP and the 2016 HIES showed 2.20% and 2.92%. The tren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KHP(APC, 1.79; $p < 0.0001$) and the HIES(APC, 1.43; $p < 0.0001$).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public healthcare interventions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especially for low-income households, are needed.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정다운, 강동익

재정정책논집, 23(1), 3-4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 발생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와 상속여부는 자산 격차 현상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수준의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 자산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형경제를 통해 자본 수익률 차이에 따른 효과, 소득세, 상속세 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본 수익률의 차이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자산 축적에도 영향을 주어 자산 불평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율의 변화에 따라서도 자산의 격차가 변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누진성이 증가할수록, 상속세율이 높을수록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 자산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산의 격차를 비롯하여 소득의 격차 등의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 및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급격한 세율 변화 및 지나치게 누진적인 과세제도는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세율 및 과세 구조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산세 이론관 점에서 과세체계 현황 분석 - 토지 및 건축물을 중심으로

차은혜, 이석희

부동산분석, 7(3), 205-225.

2018년 이후 세법 개정 등을 통해 토지와 주택의 과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조세저항은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의 기초인 재산세 이론을 학술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과세체계가 재산세 이론에 부합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재산세 이론에 따르면 토지 공급의 비탄력성, 건축물 공급의 탄력성, 공공서비스의 자본화 등의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분보다 토지분에 보다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재산세의 기본 원리에 기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산정방식인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시가방식인 토지 시가표준액을 통해 건축물 투입비용과 토지가치를 산정한 결과, 도 지역의 경우 대체로 건축물 투입비용이 토지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및 광역시는 토지가치에 비해 건축물 투입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 지역의 토지분 재산세율은 건축물분 재산세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패널을 통해 재산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현행 재산세 제도는 토지보다 건축물 투자비용에 높은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기본 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셋째, 재산세 이론과 부합하도록 현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재산세 이론 측면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세율 개선방안 측면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여가의 시간 제약과 여가비 지출간의 관계

나보리, 이슬기

문화정책논총, 35(1), 35-66.

본 연구는 가족여가비 지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양적 차원의 시간 제약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 시간 제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가족 구성원들의 공유여가 시간 확보의 예측 가능성과 가족 여가비 지출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구성원들이 확보한 시간 자원이 공동활동인 가족 단위 여가시간에 활용될 가능성이 양자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가족 여가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수록 가족 여가비 지출 규모는 증가하였다. 둘째, 가족 공동 여가일정짜기의 제약이 커질수록 가족 여가비 지출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가일정짜기의 제약은 여가시간 확보의 안정성과 가족 여가비 지출 사이의 관계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시간 제약(여가시간 확보의 안정성과 여가일정짜기 제약)과 가족 여가비 지출의 관계가 여가시간량의 절대적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살펴본 결과, 여가시간량에 관계없이 여가시간 확보의 안정성과 여가일정짜기 제약이 여전히 가족 여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여가의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여가시간 확보뿐 아니라, 시간 자원 배분과 관련한 가족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차원적 시간제약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을 중심으로

홍우형

재정학연구, 14(4), 77-106.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별이형태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부부가구에 직접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충격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패널 5~9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소득자의 특성별 분석결과 여성, 20~50세, 노동취약계층에서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효과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기부에 미치는 영향

만홍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4(2), 1-16.

지정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0%에서 3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 재정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추정한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는 기부금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 두 번째, 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는 지연 효과가 있었다. 셋째, 공제 한도의 점진적인 확대가 반드시 지정기부금의 기부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가 지정 기부금의 증가에 효과가 있으나 지연효과가 있으며, 공제 한도 확대 초기에는 지정기부금의 증가세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2. 4. 1.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225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